



혈세 · 연기금 투입 임금 동결/대량 해고 부자를 살리려고 서민을 죽이고 있다

금융시장을 통제하라



한국 경제 위기와
투쟁의 과제

3면

심화하는 세계경제 위기
Q&A

4면



오바마 돌풍의 진정한 의미

6~7면

논쟁 -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민주당 참가 문제

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맑스주의와 경제 위기

4면



등록금 인하는 가능하다

12면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V -
아르헨티나의 반란

7면

<저항의 촛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저항의 촛불> 온라인 기사

국제 공조를 통한 위기 극복?
아시아통화기금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경
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구상에 담긴 모순과 한계를 분석한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ww.resistcandle.com

이명박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단언컨대, 외환위기는 없다” 하고 강조했지만 한국 자본주의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 외신들에 이어서 이제는 누리엘 루비니, 폴 크루그먼까지 “가장 취약한 국가”, “금융 위기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라며 한국을 우려했다.

더구나 “IMF 때와는 다르다”고 했다가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리·만 브라더스’의 오락가락 때문에 두 사람이 입만 열면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 위기의 뿌리에는 <저항의 촛불>이 거듭 지적해 왔듯이 IMF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낮은 이윤율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금융이 방아쇠 구실을 하고 있지만 위기는 실물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세계적 금융 위기의 여파, 경상수지 적자와 금융기관의 부실이 상승작용 하면서 위기는 더 깊어지고 있다. 한국의 은행들은 그동안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우며 무리한 대출 경쟁을 벌여왔다. 부동산담보대출 3백30조 원을 포함해 가계대출만 6백60조 원에 달하고, 건설사들에게도 막대한 돈을 대출해줘 부동산 거품 키우는 걸 도왔다. 2008년 8월 말까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4백13조 8천억 원에 이른다.

이런 무리한 대출 때문에 은행들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이 올 8월에 1백40퍼센트 가까이로 치솟아 국제적 안전 기준인 90퍼센트를 훌쩍 넘겼다. 예금액을 넘는 대출 금액은 은행채 발행과 단기외화 차입 등으로 채워 왔다.

3면으로 이어짐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08
전국노동자대회

2008년 11월 9일(일) 오후 2시, 서울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 11월 8일(토)
오후 3시 노동자 세팅 대동마당
오후 7시 열안콘서트
오후 7시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인용해도 될까요?”

“우리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것과 마찬가지다.”

“이 카드로 만든 집이 무너질 때쯤 우리 모두 부자가 돼서 은퇴했기를 바라자.”

－ 지난해 무디스, S&P 직원들이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

“[한국의 국방부를]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국방부’로 개명해야 할 것 같다.”

－ 국방부 선정 ‘불온도서’ 저자인 노엄 촘스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경제와 금융들을 매우 잘 이해하고 대단한 통찰력이 있다.”

－ 백악관 부대변인 토니 프래토, 이명박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다

“[G20 정상회의에] 꼭 와 줘야 한다. 굿바이, 마이 프렌드”

－ 조지 부시, 이명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 위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개혁하고 규제를 없애 경제가 좋아질 때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꿈속을 헤매는 이명박

“좌절하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움츠러진 가슴을 활짝 펴게 하고, 한민족의 자력을 일깨우게 하는 강동을 전해 줘야 한다.”

－ 이명박 시정연설에 대한 한나라당의 자화자찬

“그냥 제발 입 닥쳐라! 더도 안 바란다. 한 6개월만 입 닫히고 좀 기다려. 이 사태 수습 할 때까지.”

－ 아고라 경제방의 저명한 논객 미네르바가 이명박에게

“현 시점에서 MB 사진과 ‘경제 살리겠다’는 구호를 함께 실어 봤자 뭐가 도움이 되겠느냐.”

－ 한나라당 관계자. 당사의 대형 현수막에서 이명박 사진을 뺀 이유

“강만수 전용차는 사이드카”

－ 요즘 인터넷 유머

서민들을 집에서 내쫓고 있는 뉴타운 건설

이명박은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을 없애겠다는데, 앞으로 10년간 전국 5백만 가구, 수도권에 3백만 가구를 공급하고 뉴타운 25곳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건설된 아파트 중 4분의 1이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뉴타운은 지역의 무주택 서민들을 그들이 사는 곳에서 쫓아내고 있다.

쫓겨나는 서민들

왕십리 뉴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성동구에서는 지정 구역의 전체 4천5백여 세대 중 80퍼센트인 3천8백여 세대가 자기 집이 없는 세입자들이다. 이들이 고가의 뉴타운 아파트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들에게 공급될 임대아파트는 9백30여 세대밖에 안 된다. 거리로 내몰리

게 된 이들이 일시에 집을 구하다 보니 전월세도 덩달아 치솟았다. 10년 넘게 한 지역에서 살아온 세입자들은 졸지에 거리로 내몰렸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현재 왕십리 뉴타운 1, 2구역 재개발조합은 세입자들에게 법

적으로 보장된 이주대책과 보상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세입자대책위에는 용역강패를 동원해 수차례 폭력을 썼다.

구청과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재개발조합 편을 들고 있다. 성동구청은 재개발

10월 9일 경찰은 용역강패 폭력에 항의하는 성동구 철거예정지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끌여냈다

조합이 이주비 보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주택 철거를 허용해서 주민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경찰은 용역강패들이 세입자대책위 사무실을 부수고 주민들을 폭행해도 증거가 없다며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이에 분노한 주민들이 거리에서 농성을 하자 주민 40여 명을 강제 연행해 버렸다. 한 세입자는 “뉴타운은 결국 20퍼센트만을 위한 돈 잔치일 뿐이었다”고 했다.

이명박은 부도 위기에 몰린 건설사에 9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생긴 막대한 이윤에 취해 있을 때 피해를 본 것은 집이 없는 노동자·서민이었다. 건설사가 아니라 무주택 서민과 간신히 집을 장만하며 빚더미를 떠안게 된 서민들을 위해서 9조 원을 사용해야 한다.

이종우

서민 허리띠 졸라매 주한미군에게 퍼 주기?

김영익

노무현 정부 때 미국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구실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동북아 무력 충돌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대만이 충돌하고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된다면, 한반도에 불뚱이 튀어 우리가 희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위험천만한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용산 미군 기지와 경기도 북부의 미2사단을 평택 기지로 이전하기로 했

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13조 원에 이르는 이전 비용마저 거의 대부분 한국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이 그동안 주둔 지원금을 불법 전용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한국 정부는 매년 7천억 원 이상의 주둔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려고 주둔 지원금 잔액을 한국에 돌려주지 않고 쌓아 왔는데, 그 액수가 자그마치 1조 1천2백억 원이었다.

이 돈도 부족한지, 미국은 이번에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을 대폭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이미 1인당 5천

5백만 원씩 지원금을 받고 있는 주한미군은 앞으로 1인당 1천만 원가량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 국방장관 이상희는 국정감사에서 주둔 지원금 불법 전용에 대한 비판에 맞서 미군을 옹호하는 데 급급했다.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도 “우리의 경제력이 커지고 미국은 이라크전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 … 어느 정도 분담하는 게 맞다”며 주둔 지원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려 한다.

기지 이전 비용 13조 원이면 즉시 전 국민 무상 의료가 가능하다.

매년 쏟아 붓는 주둔 지원금이면 내년 예산에서 삭감된 빈곤취약 계층 지원 예산 4천6백77억 원을 충당하고도 3천억 원이 남는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허리띠는 졸라매면서, 주한미군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마구 퍼 주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곳곳에 미군을 배치해 패권을 유지하려 하면서, 그 비용은 주둔국 국민들에게 부담시키려 한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과 전쟁 준비를 위한 비용을 우리가 떠안을 이유는 없다. 주한미군은 불법 전용한 주둔 지원금부터 반환해야 마땅하다.

또한 용산이든 평택이든, 그 어느 곳에도 미군은 발붙이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국주의 군대는 즉각 철수해야 한다.

이번에는 한총련 마녀사냥인가

최미진

경찰이 “한총련이 북한으로 부터 직접 투쟁 지침을 전달받아 실행한 정황이 있다”며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이어 한총련까지 국가보안법의 먹잇감으로 삼으려 한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정권의 위기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마녀사냥이 필요해진 것이다.

경찰은 이번에도 북한 당국자와의 접촉 등 북한과 연계했다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APEC 반대 투쟁은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다

는 빌미로 조직된 진보운동 단체들과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을 분열시키려 한다.

경찰은 한총련이 지난 2005년 9월에 맥아더 동상 철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 같은 해

11월 부산에서 APEC 반대 시위에 적극 참가한 것이 모두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양민 학살을 지휘하고, 핵폭탄 투하 계획까지 세웠다는 전쟁광 맥아더의 동상 철거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

사상의 자유

부산 APEC 반대 시위 당시 한총련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이 부산까지 가서 어청수가 쌓은 컨테이너 장벽과 물대포에 맞서 항의 시위를 벌인 것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결과가 아니

었다. APEC 반대 시위는 세계의 진정한 ‘악의 축’ 부시 방한에 반대하고, APEC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남북한 정상이 만나 6·15선언, 10·4선언까지 발표한 이후에도 남한 진보활동가들과 북한 사람들의 만남이 계속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 발표가 보여 주듯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상의 자유조차 질식당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이명박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더러운 무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현실에 맞서 싸워야 한다.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국 자본주의

》1면에서 이어짐

그런데 실물 경제에서 이윤율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빚잔치와 부동산 거품 확대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었다. 결국 미국발 금융 위기 속에 은행들은 급속도로 돈줄이 말라 갔다. 더구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담보대출이 위험해졌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가파르게 올라 부실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고금리로 더 많은 예금을 유치하거나 대출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은행들이 고금리로 나서면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며 주가는 더 폭락할 것이고, 대출을 줄이거나 회수하면 돈줄이 끊긴 기업들이 또 줄줄이 쓰러질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2백조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은행과 건설사의 돈놀이 실패를 보상해 주려 한다. 기준금리도 0.75퍼센트 낮추며 대출 금리를 낮추려 안간힘 쓰고 있다. 종부세 완화, 미분양 주택 구입,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종가세 폐지 등 부동산 거품 살리기에도 올인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쏟아 부으며 주가 폭락도 간신히 떠받치고 있다. 서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을 이렇게 불쏘시개로 쓰면서 벌써 20조 원을 날렸다고 한다.

불쏘시개

그러나 실물 경제에서 투자와 이윤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 이런 모든 대책은 밀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모르핀 주사’를 놓으며 시간을 끈다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며 외화 유동성이 풀릴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빨리 회복되기 쉽지 않은 만큼 내수 중심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운하 등 ‘삽질’을 다시 시작할 듯하다.

대량실업과 비정규직화·임금 동결 속에서 부자 감세만 한다고 내수가 살아날 리도 없다.

더구나 이명박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배는 결코 출항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며 배들이 가라앉는 바다로 일단 나가겠다는 것이다.

헛발질만 해 온 강만수 사퇴를 조중동

이런 상황을 자초한 책임은 역대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있다

조차 요구하고 있지만, 하수인을 바꾼다고 재벌·부자 맞춤형 경제 체제의 온갖 모순과 위기들이 해결될 리도 없다. 물론 강만수는 이청수·최시중·유인촌 등도 함께 사퇴해야 마땅하고 친시장 정책도 철회돼야 한다.

지난해 미국 월가의 임원들이 주고받

‘고통분담과 노사 화합’을 거부하라

이명박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통분담과 협력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노와 사의 화합만큼 더 소중한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과 기업주들은 노동자·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 동결과 금융기관 임금 동결에 이어 공기업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고, 금융권에서 일부 은행과 증권사가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건설사들에서는 이미 해고가 진행되고 있고, 쌍용차 같은 제조업체들도 정규직 전환배치와 비정규직 해고를 시작했다.

노동부는 ‘대량고용변동 신고 의무조항’을 폐지해 이런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장 박기성은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기

간 제한 자체를 없애자”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무한 확대를 고무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은행장은 지난해 연봉이 79억 원이었고, 2천9백만 원짜리 겨울코트가 팔리는 백화점 명품관의 매출은 요즘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유인촌이 아니라 노동자·서민이야말로 지금 욕지거리가 터져 나올 기분이다.

노동자·서민에게 지난 10년은 진정 ‘잃어버린 10년’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 경제는 계속 5퍼센트씩 성장했지만 노동자·서민의 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다. 성장의 열매를 다 따먹고 이제 그 쓰레기를 노동자·서민더러 치우라는 게 이명박의 ‘고통분담’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노사 화합’이 아니라 재벌·부자에게 위기의 책임을 지우고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는

았다는 “카드로 만든 집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부자가 돼서 은퇴해 있기를 바라자”는 내부 이메일은 마치 지금 ‘리·만 브러더스’가 소망교회에서 같이 하는 기도처럼 보인다.

위기 속에서도 끝없이 아귀다툼을 하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강부자 1·2중대답게 일단 부자맞춤형 위기 대책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 쌀 직불금 갈취 공범답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배제한 국정조사단 구성도 합의하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고, 조중동은 IMF 때 재벌에게 공적자금을 퍼 주고 정리하고 등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던 김대중의 리더십을 새삼 찬양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 함께 이명박에 맞서자는 진보진영 일부의 주장은 덧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막대한 세금과 국민연금을 쏟아 부어 주가를 떠받치고 금융기관·건설사의 투기적 수익을 지탱하는데 쓰는 것이 아닌 노동자·서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이 필요하다.

강력한 투쟁이다. 쌍용차 노조 지도부처럼 정규직 전환배치와 비정규직 해고를 받아들이는 ‘노사 합의’는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배신일 뿐이다.

은행·건설사를 지원하고, 주식을 떠받치고,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 주려는 돈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기업을 인수해 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를 지켜야 하고, 은행을 국유화해 노동자·서민의 필요를 위해 운영해야 한다. 당장 무엇보다 미친듯이 요동치는 금융시장을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 헤지펀드와 투기꾼들을 규제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경제 상황 악화가 자칫 정권적 차원의 위기”와 “제2의 촛불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를 말하고 지금, 이런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한 대중투쟁 건설이 중요하다.

파산한 자본주의의 사슬을 끊어 내자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자유시장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이 체제가 유일하게 올바른 체제이고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확신을 잃었다.

은행과 금융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는 빠른 속도로 다른 경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모든 나라가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기 시작했다.

벨로루시, 헝가리,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등은 국가 부도 일보 직전이다. 그 뒤에 훨씬 큰 국가들 — 폴란드, 러시아, 아르헨티나, 터키 — 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 국가는 환율이 하락하고 수출이 줄면서 무역수지를 맞추려고 사방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 형편이다.

어떤 나라의 외환보유고는 몇 주 동안 버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들은 IMF에 손을 벌리고 있다. 그러나 서방의 부국들이 통제하는 IMF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지난 경제 위기 때, IMF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정부 재정 삭감, 사유화, 시장자유화 등을 요구했다. 많은 나라에서 이런 조치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파키스탄의 경우, 이미 수백만 명이 식료품과 연료 부족으로 끼니를 거르고 있고, 파키스탄 정부는 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가스와 전력 가격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정부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삭감돼야 할 것이다.

대량 해고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것은 빈국만이 아니다. 선진 공업국가의 정부들은 은행 구제에 전문학적인 액수를 퍼부었지만,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사태 앞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저들은 빈국의 고통과 선진 공업국의 대량 해고가 자연스럽고 저항해 봐야 소

용없다고 말한다. 물건을 생산해 봐야 팔 곳이 없기 때문에 별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팔리지 않은 상품이 쌓이고 노동자들이 해고되지만, 이것은 그런 상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살 돈이 없는 것이 문제다.

지금 폐쇄되는 공장의 기계와 해고되는 노동자들은 인류가 직면한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자들은 대안 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생산하는 데 고용될 수 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껏 억압해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 그런 억압의 사슬을 깨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심화하는 세계경제 위기 — Q&A

Q 공공 지출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인은 불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공지출 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때때로 ‘케인스주의적’ 해결책으로 불린다.

좌파 경제학자들은 공적 자금이 학교·병원·공공교통 같은 사회기반시설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등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분야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컨대 영국 고든 브라운 정부의 케인스주의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브라운은 수십억 파운드를 핵잠수함·항공모함 건조나 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사용하려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케인스주의 정책이 부자의 힘을 약화시키고 노동계급의 힘을 강화할 때 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더 멀리 나아가,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인구 다수의 이익을 위한 체제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또, 누구의 돈으로 공적 자금을 충당하고 은행들을 구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정부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 자본시장에서 빌려야 한다. 이것은 재정적자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거나 공공지출을 줄이거나, 혹은 두 가지 조치를 동시에 취할 것이다.

정부의 차용은 세계경제에 연쇄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만약 전 세계 정부들이 가용 자금을 쓸어 담는다면, 민간 기업이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자금을 빌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더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고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

두 달이 넘도록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주식 시장 —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땀질식 처방은 더 커다란 위기를 낳을 수 있다

Q 이자율 인하가 도움이 될까?

일부 좌파 경제학자들은 불황의 심화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이자율을 낮추자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자율의 대폭 인하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불황기에 겪을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모기지 대출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평범한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뺏기는 것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 대출 비용도 줄일 것이기 때문

에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자율 인하가 그런 순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자율을 낮춘다고 은행들이 모기지나 기업 대출 이자를 자동적으로 낮춘다는 보장은 없다.

마찬가지로, 기업주들이 이자율 하락의 혜택을 보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한동안 이자율을 계속 낮춰 왔지만 실업률은 계속 오르고 있다.

과거 일본은 저이자율 정책을 통해 경

기 후퇴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기업의 이윤율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미약했던 것이다.

긴급 이자율 인하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전 세계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투기 거품으로 발생한 막대한 부채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바로 그 거품이 터진 것이 현재의 은행 위기를 촉발한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율 위기라는 근본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 애당초 경제의 생산적 부분의 이윤율이 낮고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금융투기에 자금을 투여했던 것이다.

Q 왜 주가가 다시 폭락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은행 구제 정책이 발표된 직후 주식시장은 상대적 안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주 주가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유는 세계적 불황을 피할 수 없다는 공포가 전반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러에 비해 유로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등 아시아 경제들이 현재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 구실을 할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과 다른 아시아 경제들도 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들은 주로 서구 국가에 대한 수출을 통해 성장해 왔다. 서구 국가가 경제 위기의 타격을 입자 아시아 국가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공개토론회

맑스주의는 현 세계경제 위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11월 12일(수) / 7시 / 부산대(추후공지) / 문의 010-8367-0610

11월 14일(금) / 6시 30분 / 건국대 상하관 316호 / 문의 011-1731-2177

연사_장시복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 <공요 속의 빈곤, 모순으로 읽는 세계경제 이야기> (책세상) 저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늘날 경제 위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들

최근 국제 언론을 보면, 오늘날 금융 위기가 (신자유주의가 잘나가던 때는 죽은 개 취급을 당했던) 칼 맑스와 메이너드 케인스의 귀환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투의 기사가 넘쳐난다.

그러나 이 위대한 지식인들의 이름이 어떤 상징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면, 그들의 사상을 오늘날 세계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데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위기가 금융시장에서 시작했다는 사실로부터 한 가지 재밌는 물음이 생겨난다. 즉, 이 위기는 주되게 금융시장의 위기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인가?

이것은 맑스와 케인스의 주된 논쟁점

중 하나다. 둘 모두 자본주의 경제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케인스는 이 불안정을 설명하며 주로 금융시장과 그것의 속성 — 투기 거품을 키우고 필연적으로 그것이 꺼질 때 심각한 경제 침체를 부르는 — 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맑스는 위기의 근본 원인이 생산체제로서 자본주의 그 자체에 있다고 봤다. 특히 자본주의 하에서 기업 간 경쟁 때문에 이윤보다 투자가 훨씬 빨리 늘고 따라서 이윤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지난주 토요일 [영국 반자본주의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주최로 긴급하게 열린 ‘맑스주의와 경제 위기’ 토론

회에서 연사들은 —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 케인스가 아니라 맑스의 손을 들어 줬다.

개막식 연사였던 크리스 하먼과 앨런 프리먼은 1960년대 말부터 자본주의가 이윤율의 장기 위기를 극복하려 애썼다는 점을 각종 증거로 입증했다. 프리먼은 이 위기를 무시한 주류 경제학자들을 비판했고, 만약 전 세계의 모든 다리가 갑자기 무너졌다면 연관된 기술자들이 무사할 수 있었겠냐고 물었다.

맑스주의와 경제 위기

또한 현재 위기의 근원이 금융시장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위기를 불러 오는 데서 금융시장이 한 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 크리스 하먼은 2000년대 초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여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기업과 가계의 소비를 진작하려고 세계경제에 값싼 신용이 넘쳐

나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엄청난 투기 거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 로빈 블랙번과 제이콥 미들턴은 은행들이 값싼 신용을 이용해 엄청나게 복잡한 형태의 투기에 뛰어들고 결국 2007년 상반기 이 구조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과정을 면밀히 추적했다.

마지막 토론회에서 피터 고완과 나는, 국가를 단위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위기가 불러올 효과를 논의했다. 고완은 국제 신용 관계를 두 가지 형태로 정의했다.

첫째는 대서양 세계(즉, 미국과 유럽연합)와 남반구 사이 관계다. 1980년대 초부터 제3세계 국가들은 외채 때문에 자국 경제를 다국적기업에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 부문인 동아시아와 미국의 관계다. 여기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벌어졌다.

》5면으로 이어짐

민생 민주 국민회의(준) 출범에 부쳐

민주당 참가를 반대하는 이유

김하영

민생 민주 국민회의(준)(이하 국민회의(준))가 10월 25일 출범했다. 국민회의(준)는 출범선언문에서 “촛불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에 맞서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 의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명박 정부 정책 전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진영의 공동전선은 진작 필요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론화된 지 석달이 훨씬 지나서야 새로운 연대기구가 겨우 꼴을 갖췄다는 사실이 짐작케 하듯 다들 의제, 조직의 성격 등을 둘러싼 이견이 그 동안 적지 않았다.

정당 참가를 둘러싼 이견은 출범식을 앞두고도 해소되지 못했다. 문제의 핵심은 민주당에게도 문을 열 것인가다. 일각의 민주당 참가 반대 입장에 대해 다른 쪽은 ‘왜 민주당만 차별하나. 민주당이 안 되면 다른 정당도 안 된다’는 물귀신 작전으로 문제를 야당 참가냐 배제냐로 비틀어 놓았다.

상당수 시민단체와 민중단체들은 반이명박 전선에 제1야당인 민주당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편다.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준) 출범선언문은 “차이를 뒤로 하고” “함께하는 넓은 연대”를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이 크게 영향을 받은 ‘각계 인사 51인 선언’도 “기존의 정당들이 지닌 잠재력과 현실적 가치를 경시하지 않는 슬기로운 방식”을 충고한 바 있다.

민주당의 계급 기반

물론 연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더 넓은 연대가 늘 더 강력한 것은 아니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다다익선일 것이다. 그러나 역학도 고려해야 한다. 하나가 나머지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 트로츠키는 반파시즘 인민전선을 비판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때때로 여러 노동계급 정치조직들의 동맹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할 때가 있다. 특정 상황에서 그러한 블록은 프롤레타리아의 이해관계와 엮비슷한 이해관계를 갖는 피억압 썬피부르주아 대중을 끌어당길 수 있다. 그러한 블록의 연합된 힘은 각 구성부분의 힘들의 단순한 합계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정치연합은 그 기본 이해관계가

180도 반대인 두 계급 사이의 동맹인지라 프롤레타리아의 혁명 세력을 마비시키는 데에만 이바지할 뿐이다.”

국민회의(준) 내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생을 살리”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구한다며?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는 기업주 편에 선다면? 한나라당 비슷한 정책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순전한 가정이 아니다. 민주당 대표 정세균은 이명박과의 회담에서 경제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오죽하면 같은 민주당 인사가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 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별로 보이지 않고 한나라당과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민주당 전 국회의원 이목희)고 했겠는가.

이런 일들은 단지 집권 시절의 ‘과거지사’가 아니다. 민주당의 계급 기반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보면 그들이 누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지 알 수 있다. 전 민주당 대표 정대철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희망돼지저금통이 아니라 2백억 원의 기업 모금에 의존했음을 고백한 바 있다.

지난 9월 25일 이명박을 만나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민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의 돈의 출처는 한나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꼭 마찬가지로 기업인들의 고액후원금 의존률이 높다. 기업인들은 흔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양다리를 걸친다(2007년 국회의원 대상 후원금 납부 명단). 2004년부터 2007년 국회의원 후원금 상위 20명 가운데 무려 12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중앙선관위).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18대)의 재산 차이도 크지 않다. 정당별 의원 평균 재산은 민주당이 29억 4천8백67만 원이

한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민주당과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촛불 운동의 주요 참가단체였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환영받을 자격이 있다.

민주당과 함께 도매금으로 넘겨질 처지에 놓인 진보신당의 이재영 씨가 “민주당에 촛불을 팔아”먹었다고 국민회의(준)을 맹비난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지난 총선 당시 심상정 대표가 추진한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평가할

고, 한나라당은 34억 7천2백47만 원이다.

독립적인 대안

흔히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민주당이라거나 적어도 민주당과 협력 없이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 수 없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끔찍한 악순환의 새로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반대하지만 그 대안이 민주당이라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엮비슷한 정책으로 노동자·서민의 환멸을 살 것이고 그 수혜를 다시 한나라당이 챙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집권의 일등 공신이 노무현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다행히 노동자·서민의 정서는 이런 현실론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명박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는 수 개월 동안 민주당은 반사이익조차 얻지 못했다.

이제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왜 민주당을 대체할 현실적인 반이명박 대안이 없을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한나라당만큼은 안 된다는 변명 아래 번번이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대안을 선택해 온 결과다.

지난해 시민단체의 일부 지도적 인사들이 대통합민주신당 창당 과정에 참가했지만,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17대 국회에서 추진한 열우당과의 ‘개혁공조’도 쓰디쓴 결과를 남긴 사례다. 민주노동당은 열우당의 대안으로 서기는커녕 동반하락했다.

국민회의(준)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이명박에 맞서 싸우면서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대안과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민주당을 참가시켜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불참시킨 뒤 원내외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의존해서도 안 된다.

때도 이 같은 입장(민주당과 함께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적용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개헌선 확보 저지와 대운하 반대가 당시 단일화 명분으로 제시됐다. 이재영 씨가 당시에도 “노무현의 새만금과 이명박의 경부운하 중 어떤 게 더 파괴적인가?” 하고 물었는지 궁금하다. 지방선거 전에 중요하게 짚어볼 점이다.

17대 국회의 ‘개혁 공조’ 등으로부터 쓴 교훈을 얻어야 하기는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다.

》4면에서 이어짐

즉, 중국과 일본이 미국에 공산품을 수출해 번 돈을 다시 미국 정부에 빌려 주고, 미국은 이 돈으로 다시 이들의 상품을 수입하고 더 많은 제국주의적 모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경제 위기의 결과로 미국이 약화할 것이지만 — 부분적으로 이것은 미국이 금융 체제를 구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외국에서 차입해 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미국을 대체할 만큼 강력한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에 직면해 유럽연합은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였고, 러시아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려면 경제적으로 더 성장해야 한다.

고완은 내가 중국의 발전 속도와 중국

지배자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고 봤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의 결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더 커질 것이고 따라서 미국 제국주의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세계를 붙잡으려 안간힘을 쓸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모든 연사들은 오늘날 경제 위기가 반자본주의 좌파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 신자유주의가 파산하고 거대 은행들이 국유화되는 이 때,

사회주의적 대안은 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회주의적 대안에 동감하는 청중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진정한 변화의 힘은 노동계급에 있다

미국 대선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영국의 사회주의자 **마틴 스미스**가 미국의 노동조합, 노동자 투쟁과 버락 오바마의 관계에 대해 논한다.

버락 오바마의 대선 운동에 대한 엄청난 열광은 수많은 미국인들이 얼마나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아주 시니컬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오바마 연설장에 나온 수많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열광 뒤에는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는 평범한 미국인들 — 미국 노동계급 — 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가 있다.

미국 노동자들은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과 의료보험에 분노하고 있고 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런 분노는 최근 보잉 — 세계 최대 항공우주·방위 기업 — 노동자 투쟁에서 볼 수 있었다. 2007년 보잉은 41억 달러의 이윤을 얻었고, 2008년 상반기에도 이미 21억 달러를 기록했다. 보잉은 3천4백60억 달러 어치 주문을 확보한 상태다. 그럼에도 이 탐욕스런 기업은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고 싶어 한다.

7주 전 워싱턴에서 보잉 노동자 2만 7천 명이 외주화, 의료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연금과 임금 인상

을 요구하는 파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워싱턴의 반대편 끝에는 플로리다 주가 있다. 플로리다에서는 농업이 핵심 산업이며, 주로 비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비숙련 노동자들이 수확한 토마토 등 각종 야채는 맥도날드, 타코벨, 버거킹 같은 다국적 외식 기업에 공급된다.

매년 수확기가 되면 라틴아메리카에서 노동자 수천 명이 이곳으로 몰려든다. 그들은 임시직이며 임금도 매우 낮다.

1993년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일부가 이모컬리노동자연합(CIW)을 결성했다. CIW는 2005년 이후 세 번의 파업을 조직했고 2005년에는 타코벨을 상대로 투쟁을 벌여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따냈다.

또, 2년 간 투쟁을 벌여 2007년에는 맥도날드를 상대로 승리했다. 맥도날드는 타코벨과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을 뿐 아니라 제3자 감시기구를 지정해 노동조건을 감독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CIW는 이제 버거킹을 상대로 전투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노동자들이 막강한 기업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투쟁들을 맛보기로 보여 줬을 뿐이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은 이런 숨겨진 투쟁을 잘 소개하지 않는다. 사실, 보잉과 CIW 노동자들의 투쟁은 미국 노동자들이 겪어 온 역사라는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부자에게 지난 30년은 좋은 시절이었다. 1979년 이래 최상위 0.01퍼센트의 수입은 4배나 뛰었다. 그러나 평범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꾸준히 하락했다.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생활수준을 유지하려고 직업을 두세 개씩 갖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그들의 삶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코노미 폴리스 유니트’의 조사를 보면, 2001~2006년 사이 미국 경제 규모는 9조 8천억 달러에서 11조 2천억 달러로 커졌다. 미국 경제는 14퍼센트 성장한 것이다.

동시에 노동자 1인당 생산성도 16.6퍼센트나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중위 소득 가정의 수입은 2.9퍼센트가 줄었다.

오늘날 미국 노동자 중 25퍼센트가 빈곤임금을 받는다. 올해 노동자 2백만 명이 자기 집을 뺏겼다. 모든 노동자들이 실업의 공포에 사로 잡혀 있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현재 9백 50만 명이 일자리가 없다. 실직자 수는 2007년에만 2백20만 명이 늘었고, 곧 실업률이 10퍼센트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백인 남성의 실업률이 5.4퍼센트인데 비해, 흑인 남성의 실업률은 11.4퍼센트고, 히스패닉 남성은 7.8퍼센트나 된다. 특히, 이제 막 취업 전선에 뛰어들 청년들의 상황은 정말 끔찍하다. 10대 실업

률은 무려 19.1퍼센트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가디언〉의 한 칼럼니스트가 지적했듯이, “오바마의 승리는 엄청난 상징성을 갖지만,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경제 위기에 대한 오바마의 대책은 2008~2009년 기업이 신규 노동자를 채용할 때마다 3천 달러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대책은 월가 규제정책에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이자를 갚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가족들에게 90일간 주택 압류를 연기해 주고, 시 정부가 이들에게 긴급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많은 노조 활동가들은 오바마 당선이 수많은 미국 노동자들이 바라는 정책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바마의 선거 운동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평등과 정의에 대한 열망을 되살리는 기회가 됐다.

아직은 작지만 미국 노조 운동에서 실질적인 부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2007년 노조 가입자 수가 31만

1천 명이 늘어 총 1천5백70만 명이 됐다. 물론 이런 작은 증가로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 노조조직률은 여전히 1920년 이래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최근에 미국 노동계급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미국에는 오랜 노동자 저항의 역사가 있다. 1934~36년에 대규모 파업 물결이 발생했고, 1960년대 말~70년대 초에는 노동조합 투쟁이 활발했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자들의 전투성을 무디게 했고, 노동자들의 에너지를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시키려 했다. 민주당이 부자들을 배불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헌신하는 정당인데도 말이다.

좀더 최근에 1999년 시애틀에서 반자본주의 운동을 탄생시킨 매우 고무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2005년에는 뉴욕에서 공공교통 노동자 3만 4천 명이 연금을 지키기 위해 3일간 파업을 벌였다. 또, 2006년에는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는 초대형 시위가 있었다.

지금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는 두려울뿐 아니라 분노와 저항을 낳을 것이다. 노조를 재정비하고, 현장 노동자 조직을 만들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요구를 연결하고, 흑인·백인·라틴아메리카 출신 노동자를 단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람들이 오바마를 지지하는 것은 단지 또 한 명의 민주당 대통령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다. 노동자들이 근본적 변화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음을 뜻한다.

미국의 진정한 변화는 지금까지 미국 공식 역사 서술에서 무시돼 온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바로 미국 노동계급에게 말이다.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Ⅳ — 2001년 아르헨티나 공황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 맞서 싸운 전 세계 노동자 투쟁 사례와 교훈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이 그 네 번째다.

미친 체제의 대안을 힐끗 보여 준 아르헨티나 항쟁

김용욱

2001년 말 아르헨티나에서 급용 위기로 촉발된 경제 공황이 발생했다. 직접적 원인은 미국의 IT 거품 붕괴가 낳은 충격이었다. 아르헨티나는 1천3백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대외 부채를 지고 있었고 1990년대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였다. 원래 1990년대 아르헨티나는 IMF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모델이었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은 전 세계를 순회하며 사유화, 노동유연화가 경제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연했다. 그러나 공황이 닥치자 지배자들이 찬양한 체제의 모순이 만천하에 폭로됐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낙농업국이자 식량 수출 국가였지만, 사람들은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공장 가동이 돌연 중단됐고, 말쑥한 원자재에는 먼지만 쌓였다. 노동자들은 일하고 싶은 생각은 어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갑자기 오늘부터 일할 수가 없었다. 중간계급 다수도 생계가 막막해졌다.

탈규제와 사유화를 노래한 모든 기성 정치 세력들이 환멸의 대상이 됐고 대중은 빠른 속도로 급진화했다. 거리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호는 “모두 꺼져라”였고, 한 의사가 토론회에서 “모든 은행과 석유 기업을 (보상 없이)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모두 꺼져라”

분노한 대중은 12월 19~20일 유혈 사태를 낳은 정부의 강경 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벌여 결국 델라루아 대통령 정부를 몰아냈다. 그 뒤로 한 달 동안 대통령이 3번이나 교체되는 폭발적 투쟁이 벌어졌다.

이런 엄청난 대중운동의 원동력은 세 방향에서 나왔다.

먼저, 1990년대 중반 탄생한 실업자 운동인 ‘피케테로스’가 있었다. 공황 이후 실업률이 순식간에 25퍼센트로 치솟으면서 이들의 가두시위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피케테로스는 전국 주요 도로를 봉쇄하고 싸우면서 분노한 대중에게 투쟁의 초점을 제공하는 구실을 했다.

또 다른 움직임은 공장점거 운동이었다. 2001년 말 위기를 전후

로 많은 공장이 부채를 갚을 수 없어 문을 닫았고, 일부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수했다. 이 운동이 정점에 달한 2001년 12월에는 2백여 개의 공장들을 노동자들이 운영했다. 비록 점수된 기업들이 아르헨티나 경제 규모의 0.7퍼센트에 그치고 대부분 고정자본이 낡은 중소기업들이었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했다.

이 운동은 삶보다 사적 재산과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에 도전했고, 노동자들이 기업주와 관리자 없이도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생산을 조직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원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이었지만, 곧 먹을 것도, 일자리도 보장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본주의를 대신할 사회의 맹아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가 됐다.

셋째는 ‘주민위원회’였다. 이것은 주거지에 기반을 둔 대중 모임으로 2001년 말~2002년 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만 1백여 개 이상 존재했다. 이 모임의 일차적 목표는 물물교환을 포함해 당장의 고통을 줄일 방편들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몇몇 경우에는 실업자, 공장점거 노동자, 빈털터리가 된 중간계급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공동의 저항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민위원회의 논의에 관심을 기울였고, 2002년 초 한 여론조사를 보면, 주민위원회에 대한 지지는 50퍼센트를 넘었다.

심지어 이 모임을 실행 중계한 TV 프로그램이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 앞에서 당시 아르헨

티나 주류 언론들은 “혁명 직전 상황”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고, 정부·사장과 IMF를 위시한 국제자본은 해결책은커녕, 외채 상환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면서 위기를 심화시켰다. 무능한 체제를 대신할 대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온갖 재료들이 갖춰졌고 사회의 근본적 변화이 곧 일어날 것 같았다.

혁명 직전

그러나 당시 반란에는 이 재료들을 결합시켜 혁명으로 발전시킬 힘을 가질 사회세력 — 노동계급 — 의 참가가 저조했다. 물론 피케테로스 시위 대열에서, 주민위원회에서,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모임에서 노동조합원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상대적 소수였다.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여 피케테로스 운동에 대한 지배자들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공장점거 운동을 주요 대형 작업장들로 확대 대안적 생산 체제의 틀을 만들고, 이 틀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진정한 대안 권력으로 주민위원회를 발전시키지 않는 이상 자본주의 체제를 지양한 대안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당시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은 기업이 도산하고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모습을 보면서 위서 많은 사람이 주민위원회의 논의에 관심을 기울였고, 2002년 초 한 여론조사를 보면, 주민위원회에 대한 지지는 50퍼센트를 넘었다.

문제는 대형 노동조합연맹 지도자들이 조합원들의 운동 참가에 제동을 건 것이었다. 지도자들은 노동계급과 ‘산업자본’ — 계급협조주의 — 페론주의 — 를 다시 부활

시키는 것이 ‘금융자본’이 초래한 경제 위기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불행히도 아르헨티나 좌파들은 노조 지도자에 도전하고 노동자들을 획득하는 활동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 좌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좌파들은 공동전선 활동을 통해 다양한 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을 연결시키며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보다는 다른 좌파조직을 공격 — 때로는 물리적으로 — 하는 데 더 열심이었다.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한 피케테로스 운동 내 자율주의자들도 대안적 정치를 보여 주지 못했다. 그들은 모든 정치 정당을 거부하며 다른 좌파들과 협력을 배제했고, 특히 노동조합원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덕분에 보수적 노조 지도자들은 다수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결국 2003년 노조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고 페론주의의 부활을 내건 구체제 인사 네스토르 키르치네르가 대통령에 당선해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시작했다.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는 2003년부터 연평균 8퍼센트 이상 성장했지만 이것은 계급협조주의의 때문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호황으로 원재료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2007년 노동자들의 임금은 2001년보다 30퍼센트가량 낮았다.

일자리 창출에도 실패해 2007년 말 실업률이 15퍼센트나 됐다. 반면 기업의 연평균 이윤증가율은 절정에 달했을 때 77퍼센트(2005년)였다. 이것은 체제 내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 줬다.

왜 미국은 시리아를 공격했나

사이먼 아사프

시리아 국경 지역에 대한 미군의 공격은 “의지의 동맹” 사이에 존재하는 분열의 씨앗을 폭로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일요일 대낮에 미군 헬리콥터가 시리아 영공을 침범해 중무장한 군인들을 투입했다.

미군들은 아부 가다야로 알려진 남성, 그의 부인, 네 명의 자녀, 농장 지킴이를 마당으로 끌고 나와 모두

사살했다. 이 과정에서 어부 한 명도 죽었다. 시리아인 수천 명이 항의 시위에 참가했고, 시리아 정부는 이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잔혹한 처형을 “테러리스트 기지에 대한 정당한 군사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시리아 정부가 중동의 긴장 완화를 위해 이런저런 행동을 한 것이 이번 공격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근 시리아 정부는 이스라엘과 평화 회담을 벌였고, 공식적으로 레바논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시리아 정부는 프랑스 정부와 가까워졌다. 미국 정부는 부활한 러시아가 시리아와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불만이 있었다.

당혹스럽게도 영국 정부는 시리아 정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영국 정부는 미군 공격 소식 보도를 듣고 황급히 기자회견

견을 취소해야 했다. 미국 정부는 자기 동맹에게조차 공격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이번 공격은 이라크 서부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저항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한 결과일 수도 있다.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든, 이번 공격으로 미국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주변 지역으로 확장할 의지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파키스탄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라크 전쟁이 시리아나 이란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목적으로 이윤과 기득권을 잃은 시리아인들이 슬퍼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 가계 부채 등으로 날마다 대중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게다가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정책의 논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 등 평범한 대중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류 언론과 대다수 정치인도 대중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의 심화와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로 대중은 두려움과 불안감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아래 집약한 요구들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즉,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체제의 논리에 도전한다. 그래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항의 결집점 구실을 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러한 투쟁은 위기 상황에서 우익이 득을 얻으려 하는 것을 막는 보루가 될 수 있고, 지배자들과 사용자들 공세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운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

물론 이 요구들 가운데 어느 것도 자본주의 체제에 명시적으로 도전하지는 않는다. 사실,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은 개혁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요구들을 성취하기 위한 노동자 투쟁의 논리는 자본가 계급 재산권의 토대를 약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자본가들과 우익의 반동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고, 그러면 노동자 투쟁은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훨씬 더 근본적으로 침해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적 우선순위의 복원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그에 따르는 고통을 모두 받아들이길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 말이다.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더 강화될 전쟁 위험과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다음의 요구들을 둘러싸고 공동의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 물가 통제와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

고유가·고물가로 말미암은 노동자·서민의 고통 완화를 위해 물가를 통제해야 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 금리인상은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임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

●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직장폐쇄와 대량 해고를 단행하려는 기업은 국유기업으로 전환시켜 노동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적절한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장이다. 왜 어떤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는 한편으로 다른 노동자는 전업, 특근 등 장시간 노동으로 삶이 망가져야 하는가? 임금 등 노동조건에 후퇴 없는 주 35시간 노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을 개선해야 한다.

● 비정규직 차별 폐지와 정규직화

전체 노동자의 무려 55퍼센트 정도가 저임금 무권리의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폐지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

● 최저임금 대폭 인상

현행의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 적어도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교사, 공무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을 폐지해야 한다.

● FTA 반대

FTA는 단지 무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품화와 시장화를 경제 전체에 강요하려는 것이다. 대량실업, 비정규직 증대, 식품안전 위협, 환경파괴, 공공서비스 후퇴 등으로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FTA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 투기자본 규제

투기자본의 활동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금융위기를 부채질한다. 투기적 수익에 종속시키고 그 세수입을 복지로 돌려야 한다.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합병과 금융투기를 규제하고, 투기자본을 양성하는 관련법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돼선 안 된다. 교육·의료·물·전기·가스·철도·금융·지하철·정유·통신·언론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이미 민영화한 부분은 재국유화해야 한다.

●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 지급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노후보장을 위한 충분한 소득원 구실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거의 절반이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다. 모든 국민에게 급여가 지급돼야 하고, 그 부담은 국민연금 급여 대상자들의 노동으로 혜택을 받은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한다.

● 부동산 규제와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과 주택이 생활에 필요한 거주지가 아니라 투기와 투자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요원하다. 부동산 투기와 투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영구 임대 주택과 국민주택을 충분히 보급해야 한다.

● 무상 의료

의료는 상품이 돼선 안 되고 예방, 치료, 재활 등 의료의 모든 분야가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영리병원 허용,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민영화는 중단돼야 한다.

● 입시 폐지와 무상 교육

초중고 학생들은 입시 경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입시 경쟁은 사교육비 폭등을 부채질하고, 자사고·특목고 등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대학 서열을 없애고 입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교육 재정을 대폭 증액해 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역행하는 등록금 인상은 중단돼야 한다. 대학 시장화와 기업의 대학 지배도 없애져야 한다.

●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누진세

정부는 대중의 요구에 대해 재원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부세 등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고 그 누진율도 올려야 한다.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정유사 등에도 중과세해야 한다.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세계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중단돼야 한다.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에 대한 점령은 당장 중단돼야 하고, 파병 부대를 철수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해선 안 되지만, 이를 빌미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데는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 친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반대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계 전략에 협력하려는 전략한미동맹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전쟁과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이 파트너가 된다면 한반도 평화도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영구 주둔을 획책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이미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도 중단해야 한다. 군비증강 예산을 복지 확충으로 돌려야 한다.

● 남북한 민중의 연대를 위해

남북한 지배자들은 수십 년 동안 남북 적대를 이용해 민중을 억압해 왔고, 화해를 시도할 때조차 민중의 삶은 안중에 없었다. 남한 민중은 외교 논리보다 북한 민중과의 연대를 우선해야 한다. 식량 지원이 대북 압박 수단이 아니라 굶주리는 북한 민중을 위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정치적 이유로 남한에 정착하려는 탈북자를 환영해야 한다. 또, 북한 인권을 빌미로 한 제국주의적 압박에 반대하면서도 북한 민중 스스로 민주적 권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바라야 한다.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도 지지해야 한다.

●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보안법, 집시법, 경찰력 강화, 인터넷·언론 통제 등 민주적 기본권을 가로막는 온갖 법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

각종 보안 수사기관을 해체해야 하고, 수감 시설과 경찰·검찰·군대 등에 대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진정한 배심원제의 도입 등 사법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패 공직자들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하고 부패 기업은 국유화해야 한다.

● 여성과 소수자 차별 반대

여성·이주자·장애인·동성애자 차별 등 부당하며 운동을 분열시키는 온갖 차별에 반대해야 한다.

여성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무상 보육이 이뤄져야 한다. 낙태 금지법, 간통죄 등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법률도 모두 폐지돼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출입국과 취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주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지구 온난화 중단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체제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을 일으키고 있고, 이는 더욱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이다. 핵 에너지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이려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역사회포럼

남부 지역사회포럼 반이명박 국민전선의 정치학 —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연합해야 할까?

연사_최영준
11월 7일(금) 오후 8시
서울교대 학생회관 2층 뒷마루
문의 010-8181-4800 / 참가비 1천 원

동대문중앙 지역사회포럼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대안은 무엇인가?

연사_김어진
11월 5일(수) 오후 8시
한국외대 인문과학관 301호
문의 02-2271-2395/011-9987-3600
참가비 1천 원

중부 지역사회포럼 경제 위기의 시기, 노동계급은 승리할 수 있는가

11월 12일(수) 오후 8시
임호빌딩 701호
(종로5가역 2번 출구 이화예식장 옆)
문의 010-7326-3286 / 참가비 2천 원

북부 지역사회포럼 오바마 돌풍 — 미국을 변화시킬 바람이 될 것인가

연사_강철구
11월 4일(화) 오후 7시 30분
인권실천시민연대 5층(한성대역 7번 출구)
문의 010-5544-4285 / 참가비 2천 원

경기남부 지역사회포럼 케인스냐 맑스냐 — 누가 위기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11월 6일(목) 오후 7시 30분
수원 경희대 국제캠퍼스 외국어대 405호
문의 010-6663-0032
참가비 1천 원

성동광진 지역사회포럼 고장난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

연사_김어진
11월 6일(목) 오후 7시 30분
여성능력개발원 3층 3강의실 (건대역 6번 출구)
문의 011-9038-0657
참가비 2천 원

〈저항의 촛불〉독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토론해 볼 만한 주제들

- 금융 위기 — 한국은 제2의 IMF 위기를 맞을 것인가
- 케인스냐 맑스냐 — 누가 위기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 1930년대 대공황, 무슨 일이 있었는가
-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대안은 무엇인가
- 경제 위기의 시기, 노동계급은 승리할 수 있는가
- 오바마는 부시와 다른 미국을 만들 수 있는가
- 경제 위기 시기의 제국주의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 신문 판매대에서도 얼마든지 물어 봐주세요.

www.alltogether.or.kr

후원 계좌 : 국민은행 (예금주 : 백은진)
694701-01-227958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주간 〈저항의 촛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6개월_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1년_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웹사이트에서도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resistcandle.com | reader@resistcandle.com

전화 : 02-2271-2395
게재번호 : 국민은행 백은진
048402-04-014849



《두 개의 미국》(조너선 닐 지음, 문현아 옮김 | 책갈피)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앙으로 집을 잃고 눈물 흘리는 가난한 흑인들

누가 너무 쉽게 미국을 망쳐 왔는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으로 삶이 황폐해진 미국 노동계급은 미국 사회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두 개의 미국》은 왜 평범한 미국인들이 변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1960년대 중반 이후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산업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했다. 미국 지배계급은 1981년 레이건의 당선과 함께 이윤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총공세를 벌였다.

항공 관제사 파업 분쇄를 시작으로 노동조합을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공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전에 받던 임금의 절반이나 3분의 1을 받으며 일해야 했다. 복지, 교통, 보육 등 공공지출을 삭감했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미국 지배계급은 1930년대와 1960년대 저항운동의 유산인 노동조합 운동, 공민권운동, 반전 운동, 여성해방운동, 동성애자해방운동을 깎아내렸다. 연대와 평등의 정신을 파괴하고 저항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분쇄했다.

대대적인 흑인 투옥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의 삶이 파괴됐다. 1980년에 연방 교도소와 주 교도소, 지역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성인은 30만 명이었는데, 이 수치는 2001년에 2백만 명으로 늘었다. 청소년 보호시설에 구금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3백만 명에 이른다.

또, 가족 가치를 강조하며 여성해방운동을

공격했고,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로 죽어 가도록 내버려 뒀다. 저자는 특유의 뛰어난 감수성으로 이 과정에서 미국 노동계급이 느꼈을 박탈감, 모멸감, 수치심 등을 뛰어나게 묘사하고 있다.

미국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자국의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방식과 똑같이 '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서 더 많은 이윤을 쥐어 짜내려 했다.

동전의 양면

저자 조너선 닐은 미국의 경제적 지배는 군사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책은 전쟁에 집중하면서 경제적 측면은 그다지 언급하지 않으며, 세계화에 관한 책은 전쟁보다는 경제적 측면만 집중해서 다룬다. 그런데 전쟁과 경제적 측면은 동일한 정책의 양면이다.”

미국은 국내에서 노동계급을 공격했던 시기인 1980년 이후로 그라나다, 파나마, 쿠웨이트, 소말리아, 아이티, 리비아, 레바논, 코소보, 세르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폭격하거나 침공했다.

지금 미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선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전 세계를 미국의 지배 아래 두고 자국의 평범한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문제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점

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조너선 닐은 “미국의 정책에만 분노할 뿐 지배계급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미국인을 탓하는 반미(反美)로 빠지고 만다”고 지적한다.

《두 개의 미국》은 미국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는 미국 지배계급과 정반대라는 점을 보여 준다. 동시에 미국 노동계급이 문제 해결의 핵심적 주체라고 지적한다.

미국 노동계급은 한동안 무기력과 쓰라림을 축적해 오다 1998년 UPS 파업과 1999년 시애틀 시위로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시애틀 시위는 미국 노동계급의 저항의 잠재력을 보여 줬다.

조너선 닐은 오바마 당선 이후의 과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가장 중요한 일은 시위, 파업, 항의 운동 등 저항이 지속되고 더 활발해지도록 활동가들이 노력하는 것이다. 두 가지 핵심 요인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하나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시위와 행동의 규모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오바마를 지지했던 활동가들이 자기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 그를 넘어서고 결국에는 그를 비판하게 될 것인지 하는 선택이다.”

《두 개의 미국》은 현재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분노가 모든 미국인들이 아니라 미국 지배계급을 향해야 한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김은영

재중 동포 이주노동자들의 비극은 무엇 때문인가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논현동 고시원 살인 사건의 피해자 다수는 중국 국적 동포들이었다.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재중 동포들의 안타깝고 비참한 삶이 드러났다.

고(故) 이월자 씨의 사연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녀는 어릴 때 중화상을 입어 두 다리를 못 쓰는 아들의 수술비와 돈이 없어 결혼식을 못 올리는 둘째 딸의 결혼비용을 벌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한다. 그녀는 하루 12시간 넘도록 고된 식당 일을 하면서 밥값을 아낀다고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가져다 먹으며 1.5평 남짓한 ‘쭉방’ 고시원에서 살다가 참변을 당했다.

올해 1월 이전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사망자의 다수가 재중 동포들이었다. 1년 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희생자들 중에도 어김없이 재중 동포들이 있었다.

이런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재중 동포, 이

주노동자들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언론들은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전하지만, 왜 이들이 이런 처지에 내몰리는지 말하지 않는다.

재중 동포들의 연이은 참사 사건들의 근원에는 바로 정부의 차별적인 동포 정책과 이주노동자 정책이 있다.

헌법불합치

중국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에 따라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됐지만, 지금도 이 동포들은 재외동포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저 일부가 5년간 체류와 왕래가 가능한 ‘방문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이 방문취업제로 들어와 있는 30만 명의 재중 동포들은 여느 이주노동자들처럼 열악한 처지에 있다.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규제하기 때문에 1천만 원 이상의 ‘브로커 비용’을 지불해야 이 비자를 손에 넣는다고

절규하는 고시원 살인 사건 희생자의 유가족 — 이런 비극의 바탕에는 정부의 차별적 정책이 있다

한다. 한국에 들어와 1~2년 동안은 죽어라 일만 해야 ‘브로커 비용’을 갚을 수 있다.

체류 자격이 없는 동포들의 처지는 더 끔찍하다. 올 4월 재중 동포 김은남 씨는 밀항으로 한국에 들어와 메추리 농장에서 5년 동안 매일 19시간 중노동을 하고 1백만 원을 받았다! ‘불법’이라는 처지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농장주의 상습 폭행도 견뎌야 했다. 3만 명이 넘는 재중 동포들이 ‘불

법’ 처지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나와 상담을 했던 한 재중 동포가 “차별 때문에 분통이 터지지만 그래도 어쩔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서 살 수가 없는데”라며 고개를 떨구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 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입국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10월 15일부터, 60세 이상 고령 동포들에게는 제한 없이 발급해 줬던 방문취업비자 발급이 중단돼 이제는 한국어 시험과 전산 추첨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한국 국적자가 초청할 수 있는 인원도 10명에서 3명으로 제한됐다. 방문취업 노동자는 무려 4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의 근무처 변경도 없이 일했을 때만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한다.

최근 연이어 발표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과 체류 요건 강화 조치들과 더불어 동포들에 대한 입국 규제 강화는 동포를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끔찍한 처지로 내몰게 될 것이다.

정부는 재중·재러시아 동포들에게도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재외동포법을 즉각 적용해야 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온전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런 출입국 규제를 유지, 강화하는 한 이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기고와 편지를 환영합니다.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유동성 위기가 보여 주는 자본의 실패

〈저항의 촛불〉 10호의 ‘이명박의 위기 대책 — 투기꾼들에게 ‘묻지마’ 형세 퍼 주기’ 기사는 노동자·서민 구하기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훌륭한 기사였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은행들이 “낮은 이자로 해외 단기자금을 빌려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기하다가 최근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 국내 시중은행들에 찾아온 유동성 위기는 ‘파생금융상품 투기 손실’보다는 ‘투기적 대출’에서 비롯 한 자금 경색 성격이 훨씬 짙다.

지금 경색

현재 시중 은행들은 예금으로 모은 돈의 1백30퍼센트에 이르는 돈을 대출에 사용한 상태다. IMF 이후 추진한 은행 대형화(합병) 과정에서 적해진 시장 점유율 경쟁은 무리한 자산(대출) 확대 경쟁으로 이어졌고 부동산 거품을 배경으로 한 가계대출은 기업 수익성이 낮아진 여건에서 더 수익성 있는 시장이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금융 정책은 은행이 전통적인 예금대출마진보다 비

(非)이자수익인 보험과 펀드 등의 상품 판매에 주력하도록 했다. 보험과 펀드 판매 수익은 수수료 수익이므로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지속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예금으로 와야 할 자금이 보험과 펀드로 빠져나가면서 대출 확대를 뒷받침할 예금이 부족해 졌다. 그래서 국내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원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은행채, CD[양도성예금증서] 의존에서 나아가 단기 외채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자금 경색 국면에서 달러 유동성 위기까지 날고 있다. 더구나 부동산 거

품이 꺼지기 시작하며 대출 부실화도 확대되고 있다.

은행 자금 경색은 흑자 기업에 대한 대출까지 어렵게 만들어 은행발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시중은행들에 2백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 보증을 한 이유가 이것이다.

국내 은행들의 실패는 단순한 투기 실패가 아니다. 기업 수익성(이윤율) 저하에 직면한 한국 자본의 몸부림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증거다. 은행 국유화와 민주적 계획경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하는 이유다.

김문성

펀드 유치에만 열을 올리던 은행들이 ‘굿 찬스’는커녕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러시아 혁명 때 꽃핀 대안적 교육의 실험

지난 〈저항의 촛불〉 10호에 실린 ‘자본주의와 교육’은 자본주의가 얼마나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억누르는지 잘 묘사하고 있다.

연대와 창의성, 교육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가 특징일 새로운 사회의 교육 방식은 불박이처럼 경쟁을 달고 다니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이후 교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의 경험은 사회주의에서 교육이 어떤 모습일지 힌트를 주고 있다.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후 1918년에 시험제도도 폐지됐다. 모든 학교에 남

녀공학제도가 도입됐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위한 광범한 자유가 보장됐다. 12세 이상의 학생 대표자는 학교당국에 고용된 노동자 대표들, 교육인민위원회 대표자들과 나란히 교육 과정과 학교 운영에 대해 발언하고 결정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집처럼 부여되던 숙제가 없어졌고,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성가신 종결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에서 해방됐다.

학생과 교사는 동지적 관계로 바뀌었다. 학교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멋멋하고 용기있게 자신의 태도를 표명하라”고 가르쳤다.

강철구

소말리아 파병이 해적 퇴치법?

한국 정부가 10월 27일 소말리아 해군 파병을 위해 바레인과 지부티로 실사단을 파견했다.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를 내세워 해적 퇴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한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는 파병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파병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UN 안보리 결의 제1838호는 친미 폭두각시 소말리아 정부를 도와 해적을 소탕하는 결의안이다. 2006년 동원호 피랍 사건 당시 한국 정부의 책임 전가·늑장대응을 폭로한 김영미 PD는 최근 참여연대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소말리아 정부는 통치력이 없어 사실상 정

부 기능을 못한다. 소말리아인들은 미국과 폭두각시 정부를 공공의 적으로 여긴다”고 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 소말리아에서 UN 직원이 파살되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다.

위선적 논리

정부의 한국 선박 보호 논리도 위선적이다. 동원호 피랍 당시 한국 정부는 남치세력과 협상할 수 없다며 선원들을 방치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미군이 무력 진압하려던 바람에 선원들이 줄지에 인강방패가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동원호 선원들은 정

교생실습에서 느낀 숨막히는 교육 현실

나는 10월 한 달간 강북에 있는 한 중학교로 교생실습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난 ‘미친 교육’ 현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내가 상담했던 아이들 중 대부분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들어가기 위해 외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입시 설명회를 다녀 온 엄마가 1학년 때부터 잘해야 한다고 했으며 밤 11시까지 학원에 있다고 했다. 학생들은 일제고사를 치고 시험을 못 봤다며 우는 3학년 선배들을 보며 자기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

이 얼마나 끔찍한 현실인가. 일제고사는 전국의 학생과 학교를 한 줄로 세워 성적순으로 잘라 버리겠다는 것으로, 학생들이 중학생일 때부터 입시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게다가 올해부터 ‘대학자유화’라는 명목으로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줬다.

그 결과는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이다. 말이 의혹이지, 실상 공공연한 비밀이다. 경기지역 외고를 다닌 학생 중 약 30퍼센트가 고려대와 연세대에 입학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대학을 평준화시켰던 투쟁처럼, 그리스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던 투쟁처럼,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이 1위인 이 미친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저항이 필요하다.

나지현(고려대학교 사범대 학생)

현대차 정규직 현장조직들의 책임 방기

〈저항의 촛불〉 10호의 현대 자동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통합 부결을 다룬 기사에서 정동석 씨가 지적한 것처럼,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통합안 찬성 발언을 조직하지 못한 것도 문제긴 하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는 이번 대의원대회 전후 현장조직 어느 곳에서도 대의원과 조합원들에게 노조 통합 찬성을 호소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내가 알기로 대회가 열리는 며칠 동안 노조 통합을 지지하는 정규직 현장조직들의 유인물 한 장조차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번 부결은 단결을 위해서 정규직 노조의 선진 노동자들이 끈덕지게 조합원들을 설득해야 함을 새삼 보여 줬다.

가야

높은 대외의존도가 위기의 원인인가?

지난 10월 14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정태인 교수 초청 강연에서 정 교수는 현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거의 80퍼센트)가 문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민 복지를 확충해 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대기업의 이윤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 확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올바른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외의존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생산 계획’과 ‘이윤 분배’에 관한 문제다. 대외의존도가 높더라도 높은 수준의 복지와 임금이 보장된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

노동자·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낮은 대외의존도가 아니라 올바른 생산 계획과 이윤 분배다. 이같은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박용석

오바마는 부시와 다른 대외 정책을 추구할까?

부시의 실패, 월가의 부패, 금융 위기 때문에 증가한 반전 여론과 대중적 불만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대외 정책에서 오바마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대외 전략도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적 패권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라크 조기 철군에 대해 오바마는 유혈사태가 악화하면 미군 철수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항상 덧붙였다. 또한 9월 초에 오바마는 ABC 방송에서 “우리는 미국의 군대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2009년도 미국 군사비가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인 7천1백10억 달러(미국 연방 정부 예산의 20퍼센트)로 결정될 때 군비 감축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3월 미국 유대인 그룹인 AIPAC 연설에서도 오바마는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전쟁광’ 이미지를 벗으려는 매케인이 “이란이 원자력 발전용 우라늄 연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유언하게 입장을 선화한 반면, 오바마는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이란이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의 보수성에 안심한 공화당과 네오콘 주요 인물들(폴린 파웰, 스콧 매클렐런, 수전 아이젠하워, 프랜시스 후쿠야마 등)은 미국 제국주의의 지도자로 오바마를 선택했다. 이 속에서 오바마가 과연 부시와 얼마나 다른 정책을 추구할 수 있었는가?

전주현

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

이명박 정부가 시행하려는 법인세나 소득세·종부세 인하보다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가세 인하가 서민에게 이롭다.

최근 국정조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는 “재정이 건전하므로 법인세는 감세해도 문제없다” 하고서는, 부가가치세 감세안이 나오자 ‘재정건전성이 위태롭다’고 말바꾸기를 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되는 물건이나 용역(서비스)에 10퍼센트를 과세하므로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율로 낸다. 따라서 이 세금의 대부분은 서민들이 낼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법인세·종부세·소득세 등 직접세보다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를 더 많이 거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지금보다 많은 법인세·소득세가 부과된 1970~80년대에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들은 경제 위기 때 기업이나 부자 들의 세금 부담을 서민이나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인하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처럼,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내리라고 주장해야 한다.

권오현

2008년 11월 3일(월)까지 지역과 대학, 작업장의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letter@resistcandle.com

2차 로비 농성에 돌입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병원 로비 농성을 하다가 10월 6일 구사대에게 강제로 끌려 나왔던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월 27일부터 용감하게 2차 로비 농성에 들어갔다.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면담을 수차례 취소하고 병원장이 국경감사 증인 출석까지 거부하자, 다시 로비에 들어간 것이다.

파견업체가 노동자 한 명당 60만 원씩 중간착취를 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된 직후여서인지 노동자들의 분노도 더 높았다. 보건의료산업노조도 로비 농성을 함께 준비하며 지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끌려 나오면 또 들어갈 겁니다” 하고 당차게 결의를 밝혔다. 강남성모병원 정규직자부 지도부는 더는 망설이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로비 농성에 대한 연대 활동에 공식적으로 나서야 한다.

연대

정규직 조합원들 중에도 ‘나도 갑자기 비정규직이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는 노동자, 노동강도가 심해서 인력 충원도 모자랄 판인데 병원 측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느끼는 노동자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차곡차곡 쌓인 불만과 두려움들을 모으고 조직



“끌려 나오면 또 들어갈” 결의로 2차 로비 농성에 돌입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는 첫 출발은 정규직자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 주는 것이다. 그런 장면을 보는 즉시, 정규직자부 지도부에게 쓴소리 하던 많은 연대대우들은 정규직자부를 열렬히 응원할 것이다.

그런 연대의 소중함은 얼마 전 병원 앞 촛불집회에서도 잘 드러났다. 한 시민이 발언을 통해 “왜 정규직이 이 투쟁에 결함을 못하는 것인가?” 하고 답답해 하자, 한 정규직 조합원이 병원 측 보안 직원의 감시가 있었음에도 용감하게 발언을 했다.

“천막 농성이 잘 되는지 걱정하고 하고 당한 것을 안타까워 하는 동료 조합원들도 많다. 감시와 통제가 심해서 촛불집회

에 참여하지는 못해도 이 투쟁을 지지하는 정규직 조합원들이 많다.” 비정규직 조합원이 울먹거리는 그녀를 안아 주며, “함께 싸워서 이기자”고 서로 다짐했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다른 병원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도 있었다. 고려대 병원의 한 정규직 조합원은 ‘정규직과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노동강도가 더욱 심해져 숙련된 간호 보조 인력이 중요하다’고 조목조목 이야기해서 성모병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힘을 줬다. 이런 연대의 확산이 투쟁 승리의 관건일 것이다.

김여진

쌍용차는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라

쌍용차가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고 나섰다. 사측은 자동차 판매량 감소를 들어 정규직 노동자를 전

환배치하고, 그 자리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3백50여 명을 휴직시키겠다고 했다. 휴직과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9월 이후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를

없다”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들은 “왜 우리에게 뒤흔쳐주는가! 경영진이 책임지라”며 싸우고 있다. 비정규직 2백여 명은 지난 22일 노조를 설립하고 급속노조에 가입했다.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인수된 쌍용차 사측은 이미 지난 4년간 정규직 5백

50여 명과 비정규직 6백 명 등 무려 1천2백 명을 야금야금 해고해 왔다.

이번 공격도 비정규직이 먼저 대상이 됐을 뿐이다. 이미 사무직도 순환휴직제 확이 나왔고, 내년 초에는 생산라인 정규직으로 구조조정이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의 공동 투쟁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노조도 “정규직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그럼에도 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의논도 없이 사측의 계획에 합의해 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곧이어 다칠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도 길을 터 준 꼴이다.

이 상황에서 독립적인 투쟁을 건설하려는 현장 활동가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는 일부 ‘현장조직’들의 활발 대담한 연대 활동이 필요하다.

쌍용차 사측뿐 아니라 현대차에서도 차량 단종을 이유로 비정규직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전환 배치, 임금 동결, 대량감원 시도도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에 맞서 우리는 더 단호하고 강력한 단결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정종남

투쟁 5백 일을 맞이하는 이랜드 노동자들

지난해 비정규직 악법 시행과 함께 시작돼 전국을 뒤흔든 이랜드 투쟁이 11월 1일 5백 일을 맞는다.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투지와 투쟁 지지 여론의 확산은 이랜드 사측의 매출 손실로 연결됐고 노동자 탄압에 아깝지 않은 결국 홈페이지를 홀플러스(삼성 테스코)에 매각했다.

노조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홀플러스와 첫 교섭을 진행했다. 홀플러스는 홈페이지의 유통기간 지난 음식 팔기, 카드깡 등으로 나빠진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고 새 출발을 하려 한다. 그 중에서

도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응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삼성 경영진 출신인 사측은 무노조 원칙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 저항의 선봉에 선 김영옥 이랜드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파업 노동자와 지·분회장의 복직은 ‘법대로’ 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긴 싸움에 조합원들은 생계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지난 6월 홈페이지 월드캡점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다함께 서무모임을 비롯한 11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원대책위원회와

함께 무기한 농성과 금요 정기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과 10월 18일 두 차례 진행된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생계비 마련 바자회에는 이랜드일반노조 월드캡분회 지원대책위와 투쟁을 지원하는 네티즌·시민,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회 등이 함께했다. 홀플러스에 소망을 하려 온 시민들도 격려를 보내 줬다.

이랜드 노동조합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탄압에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고 있다.

최윤진

등록금을 인하하라

선영

심각한 경제 위기와 높아지는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2년 전에 비해 11배나 증가했다! 그런데 치솟는 물가, 줄어드는 일자리, 막대한 등록금에 짓눌린 학생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도 대폭 인상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는 “올해 등록금을 너무 적게 올렸다”며 내년에는 더 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등록금이 1천만 원에 육박하는 주요 사립대학들도 내년 등록금을 물가 인상률보다 높게 6~7퍼센트 이상 올릴 계획이다.

사립대학들은 예산을 뺏기기해서 매해 등록금 인상분의 두 배 가까운 돈을 쌓아 적립금이 7조 원이 넘었다.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두 배 이상 오르는 사이 사립대

학의 총자산은 2.6배나 불었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운 적이 없다”고 말하며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손병두는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등록금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등록금을 인상해서 모은 돈으로 펀드이나 투기하는 적립금 불리기 경쟁은 진정한 교육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으려고 등록금을 뺏기기 책정하지만 않아도 등록금을 15퍼센트 정도 인하할 수 있다. 3조 원만 있으면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등록금상한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상교육,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를 모두 시행할 수 있다. 12조 원이면 대학까지 무상 교육이 가능하다. 최근 정부가 은행·건설사의 투기적 손실을 메워 주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기 위해 들이는 수백조 원에 비하면 무상 교육에 드는 돈은 그야말로 얼마 안 되는 돈이다. 이 돈은 투기꾼이 아니라 학생, 노동자·서민의 절실한 필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고 학내 비정규직·정규직 직원 들을 해고

하며 노동자·학생에게 고통을 전가하려 한다. 그러나 얼마 전 성신여대 비정규직 투쟁, 연세대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는 희망을 보여 줬다.

올해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도 예년에 비해 발전했다.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나서 등록금 문제가 단지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서민의 삶을 파탄내는 전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요구사항도 등록금 인상 반대를 넘어 등록금 인하 요구로 발전했다.

추락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전가하려는 대학과 이명박 정부에 맞서, 등록금 투쟁에 학생·노동자 들이 더 많이 참여해 더욱 강력하게 운동을 벌여야 한다.

2009년 등록금 인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시민학생학부모대회

11월 1일(토) 오후 2시 청계광장
주최 : 4기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등록금네트워크

200조

은행·건설사 구제를 위한 지출

12조

대학까지 무상 교육 가능

3조

등록금상한제 도입 가능

자신의 영정 사진을 들고 나와 비싼 등록금 때문에 겪는 고통을 표현한 대학생

대전 목수 파업

파업으로 대폭 임금인상을 쟁취하다

김승섭

전국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

전국건설노조 대전충청건설지부 목수 조합원 2백 명이 9일간 파업 투쟁을 통해 10월 22일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일급이 11만 원에서 13만 원(팀장 16만 원)으로 인상됐다. 건설노동자가 월 23일 정도 일하는 것을 감안하면 월 50만 원 가까이 임금이 오른 것이다.

이번 파업에서 사측이 ‘13만 원으로 임금

인상을 하면 전문건설업체가 망한다’고 엄살을 떨었지만 건설노동자의 단호한 투쟁으로 이는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목수 노동자 투쟁의 승리는 전국의 건설노동자에게 자신감을 줬고, 앞으로 투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번 투쟁으로 현장에서 임금을 적게는 30일, 많게는 70일이나 미뤄 지급하는 불법관행인 유보임금(속칭 ‘쓰메끼리’)도 15일 이내로 줄여 줬다. 대전 목수 노동자들은 이번 승리의 자신감으로 내년에는 근

로시간 단축 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자·서민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IMF 후유증에서 다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IMF 때 부도났던 대형건설사들은 지금 잘나가고 있고 수십조 원을 횡령한 건설회사 회장도 사면됐다. 반면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 강요, 임금 체불, 산업재해 은폐가 계속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최소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10·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간 땅투기와 분양가 거품을 만들며 폭리를 취해 왔던 건설사에 9조 2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반면 10월 16일에는 1백 일 넘게 체불된 임금 해결을 요구한 건설노동자 25명을 업무방해혐의로 전원 연행해 노골적으로 이중 잣대를 보여 줬다.

자본주의 체제가 낳은 위기의 책임은 자본가들이 물어야 한다. 고용과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